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98호 1판 (음력 4월 21일) 2017년 5월 16일 화요일

건강한 라미란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①발포명령자 밝히고 ②헬기기총소사 규명 ③행불자들은 어디에

문재인 시대
광주·전남 현안 점검

〈2〉 5·18 3대 과제 해결
의혹 밝히겠다 대선공약
완벽한 진상규명 기대

37년이 흘렀지만 광주시민, 전남도민은 '5·18, 그날의 진실'을 원하고 있다. 37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광주학살의 핵심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게 광주전남 지역민의 일치된 생각이다.

지난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의 집단발포는 누구의 명령에 따른 것인가,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헬기사격 흔적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감행된 것인가, 80년 5월 소리없이 종적을 감춘 5·18행방불명자는 어디로 갔는가 등은 여전히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이러한 518 핵심 의혹을 밝히고 5·18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지도자로 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앞서 대선기간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관련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 "호남을 더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의 발언을 믿고 있는 것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5·18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놨다. 그는 518문제 해결의 '총론'으로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공약했다.

5·18정신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5·18민중항쟁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다.

5·18 관련 세부공약으로는 국가 차원의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해 5·18 당시 발포명령자 및 헬기기총소사 책임자 처벌 등 '완벽한 5·18 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18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명령자, 5·18 행방불명자 매몰지 등 핵심 의혹을 모두 밝혀내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5·18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두환을 필두로 한 5·18 정신 훼손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공약에 반영했다.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정부와 군(軍)이 보유한 '5·18 관련 자료 폐기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호남인의 분노가 크다. 집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집권 이후 즉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짧고도 강한 입장을 내놓은 문 대통령은 실제로 집권 후 전격적으로 박 보훈처장을 '경질' 했다.

박 전 보훈처장 경질 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등 5·18 관련 논란을 수시로 일으켜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대로 집권 후 즉각적으로 박 보훈처장 경질한 점을 보면서 풀리지 않은 5·18의 핵심 의혹을 풀어줄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정춘식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박승춘 경질, 518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변화를 실감하고 있다"면서 "도청 앞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명령자, 5·18행방불명자 매몰지 규명을 포함한 전모를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문화전당 하늘마당 쓰레기 몸살 ▶7면
新 湖南誌-남도 젖줄 영산강 ▶18면
김시우 PGA '21억 역전샷' ▶20면

윤장현 광주시장이 15일 오후 광주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5·18 헬기 사격 진실 입증과 새 정부의 5·18 국가 의제'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1980년 5·18 당시 'UH-1'헬기가 전일빌딩(옛 광주일보 사옥) 앞을 비행하고 있는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18 전일빌딩 헬기사격 육본이 지시"

광주시, 작전지침 공개…"UH-1헬기에 M-60 장착 기총소사"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 도청 진압작전 공중엄호 위한 듯
국가 차원 조사권 가진 규명위 꾸려야…진상규명 특별법 시급

광주시는 15일 광주시청에서 헬기사격 관련 브리핑을 열고 "5·18 당시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 헬기사격이 육군본부 작전지침에 따라 계획적으로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면〉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차 감정결과를 토대로 UH-1헬기에 장착된 M-60 기관총에 의해 이뤄졌다고 결론 내린 광주일보 보도〈4월 20일자 1면·21면〉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헬기공격 시점은 5·18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씨 증언〈2월 6일자 6면〉과 5·18 당시 투입된 11공수 지대장(중위)의 광주일보 인터뷰〈5월 15일자 1면·3면〉와 마찬가지로 지난 1980년 5월27일 새벽, 헬기공격 이유는 공부부대의 도청 진압작전 공중엄호를 위해서라고 추정했다.

광주시는 헬기가 무장을 갖춘 시점에 대해서는 육본 작전지침 가운데 'Hel기 작전계획 실시' 명령서가 접수된 22일 오전 8시 30분으로 추정하고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광주시는 M60 기관총 장착 가능한 헬기인 UH-1헬기 운용 부대 중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부대가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라는 점에서 이 부대를 전일빌딩 헬기사격 투입부대라고 지목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일련의 주장의 근거로 육군본부 작전지침·20사단 작전일지 등 군 자료, '12·12 및 5·18 사건' 당시 검찰 수사기록 분석, 광주시 5·18진실규명 지원단이 진행한 관련자 인터뷰 자료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지침에 따라 5월 22일 이전 투입된 헬기 무장이 진행됐으며 육군참모차장 황영시는 23일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기갑학교장 이구호 등에게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을 하달했다고 광주시는 부연했다.

5·18 당시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은 광주에 투입된 육군 31항공단 103항공대대장에게 "(5월 22일) 광주천을 따라 벌컨포 사격을 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광주일보 1월 19일자 6면〉.

광주시는 전일빌딩에 대한 헬기사격이 이뤄진 시점을 계엄군이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폈던 27일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추정했다. 진압작전 당일 3공수여단 작전상황일지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뒷담을 넘던 공수대원들은 전일빌딩 옥상 방향에서 중화기 공격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과 마주했다.

신군부 지휘부는 전일빌딩에 시민군 3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민 증언에 따르면 전일빌딩과 주변 건물에는 40～50명의 시민군이 배치됐다.

광주시는 다수 시민군과 자동화기가 배치된 전일빌딩과 주변 건물에서 1시간 동안 교전 상황이 이어졌고, 계엄군이 공중화력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브리핑 자리에서 "5·18 헬기사격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국가차원의 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한다. 광주시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文대통령,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한 순직 인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이 인정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학생을 구조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담임교사로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다. 이에 유족은 지난 2015년 6월 순직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심사대상에 두 교사를 올리지 않고 반려했다.

윤 수석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 공약으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